

백신 잔여량 사용 논란 후폭풍... “현장 부담 안줘” 진화안간힘

“의무화 아니어서 현장 부담감 주는 상황 아냐”

“현장 모니터링, 식약처 협의 통해 방침 정할것”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병의 잔여량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백신은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제 생각에는 원래의 허가된 내용과 사용법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 일선 의

료기관에 백신 1병당 잔여량이 있으면 현장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가령 1병(바이알) 당 6명 접종이 권장되는 화이자 백신은 6명 접종 후에도 잔여량이 있으면 7명까지도 접종해도 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허가된 용법은 화이자 백신 1바이알 당 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바이알 당 10명이다.

그러나 추가분의 잔여량을 만들 수 있는냐를 놓고 의료진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정해진 용량보다 적게 접종을 해 면역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 본부장은 “일률적으로 1바이알

당 몇명을 소분할 수 있다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린다”며 “다만 현장에서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쓴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1바이알 당 7명을 꼭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화를 해서 현장에 부담감을 주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잔여량이 발생했을 때 사용 여부는 현장 의료진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잔여량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바이알과 섞으면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접종을 시작한 지 이제 3~4일 정도고 접종자의 숙련도나 잔량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준 변경을 계획하고 있

지 않다”며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이 어떤지 계속 관찰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한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원래 화이자 백신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LDS주사기 4000만개를 구매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정확히 소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LDS주사기를 일단 공급해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다른 백신들은 대부분 1인용으로 포장돼 나오지만, 코로나19 백신은 다인용으로 제작돼 주사기로 소분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잔여량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LDS 주사기 사용으로 추가 잔여량이 생길 경우에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방침을



드린 것”이라며 “간호사들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허가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식약처에서는 1명당

접종하는 접종 용량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잔여량 사용)은 허가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데, 잔여량 사용 여부가 허가 사항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를 하고, 잔여량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질서유지선 안에서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삼일절 국민저항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소방, 소방시설 안전불량 공사장 12곳 적발

전남소방본부는 도내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소방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공사장 1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12곳(10.6%)에서 2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종류별로 임시소방시설 불량 14건,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4건,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2건 등이다.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위험

물 임시저장 미승인 등 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불량 등 14건은 시정조치 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관계자 특별 안전컨설팅을 통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대피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층간 확산’ 광주 콜센터 건물, 자가 격리 대상 재분류

4층 콜센터→5·6층 거쳐 12층 사무실까지 감염 확산

기준 ‘능동 감시’ 대상 12층 근무자 260명 전수 검사

진단·역학 조사 결과 토대로 자가 격리자 확대 결정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보험사 콜센터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 해당 건물 주변에 인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의 한 보험사 콜센터 집적 건물 내 집단 감염이 층간 확산으로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 대상자를 재분류한다.

1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서구 상무지구 광주도시공사 사옥 내 4층 라이나생명 콜센터에서 일하는 광주 1994번째 환자는 기침·가래

등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초 방역당국은 4층 사무실에 한해 밀접 접촉자로 판단, 자가 격리·능동감시 대상을 나눴다.

그러나 지난달 24일에는 5층과 6층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랐고, 전날에는 12층 라이나생명 콜센터 사무실에서

도 확진자가 추가됐다.

첫 확진자(광주 1994번째 환자)가 지난달 22일 발생한 이후 콜센터 건물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47명이다. 층별 확진자는 ▲4층 35명 ▲5층 9명 ▲6층 1명 ▲12층 2명 등으로 집계됐다. 간접 감염 사례인 가족 9명·지인 6명·미화원 1명까지 더하면 63명이다

특히 12층에서 근무한 확진자는 지하 식당을 수 차례 이용, 다른 직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자 시 방역당국은 지하 식당을 이용한 능동 감시 대상자·12층 사무실 근무자 등 총 410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2층 사무실 내에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만큼, 시 방역당국은 당초 능동 감시 대상자였던 12층 근무자 260명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전일 검체 채취를 마쳤다.

12층 근무자 206명 전원의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온다.

시 방역당국은 전수 검사 결과와 보고 역학조사 등을 토대로, 일부 능동 감시 대상자는 자가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험사 콜센터 집적 건물 내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인 대상자는 478명이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